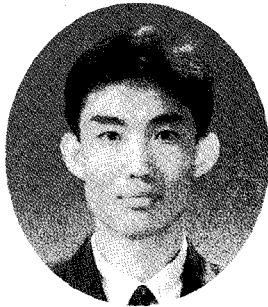


낙농진흥회의 올바른 출범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바란다



유영선
동아민신문 기자

진흥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틀을 짜는 작업중에 공식이나 기준은 없다. 조그맣게 시작해도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되는 일이다.

진흥회 설립과 관련,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주위 의식과 잘못된 목표치에 두려워하면 안된다. 오직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낙농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를 이다. 굳이 이름 짓자면 사명감을 갖고 매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해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따라 내년부터 낙농진흥회가 출범한다. 그러나 진흥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설립위원회의 준비작업을 궁급해하고 있다.

진흥회는 장기적인 낙농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당장 안정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된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원유계약생산제나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등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렘 정도로 낙농가들에게는 갈망하는 단어들이다.

이를 법제화시키고 낙농현장에 실현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다. 그만큼 설립위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하나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작업 또한 벅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를 아는 관계자들은 설립위의 노력성을 호평할 지언정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선불리 논할 수 없을 줄 안다.

그러나 회원이 없는 진흥회는 존재할 수 없듯이 낙농가들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작업은 그때그때 필요하다. 설립위가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하는 일은 어디까지 추진중인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낙농가들로서는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 가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흔쾌히 기대만 갖고 가입하는 낙농가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설립위의 업무중 가장 비중을 두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대 낙농가 홍보작업이다. 진흥회 출범을 2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진흥회 활동을 머리 속에 그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

라면? 설립위의 노력은 실패로 보아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현재 설립위가 똑바로 매듭지는 과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설립위 관계자들로서는 많은 것을 홍보한다는 입장을 갖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질병과 기쁨은 알릴수록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듯이 난관이 있으면 여럿을 끌어들여 함께 공유하는 게 슬기로운 일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책임과 권한이 결핍된 설립위 사무국 측은 지금도 "결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말없이 준비하고 보고만 할 따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준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낙농정책이나 원유수급조절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내년부터는 준비업무에서 벗어난 잘못을 누구를 상대로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겠는가 의문이다.

설립위 사무국은 우선 입장정리부터 해야 한다. 진흥회를 만드는 주체인 만큼 한시적이지만 권한도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전국 각지를 돌며 진흥회에 대해 홍보교육하는 것은 현상성 있는 낙농육우협회에 맡겨도 된다.

과거 10년이 넘게 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동조했던 낙농육우협회 등의 관련단체는 진흥회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낙농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진흥법 개정 결과를 설명하겠는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단체들은 설립위 업무과정을 질책하고 평가해야 한다. 맡겨진 일이 없다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바라만 본다면 관련단체들에게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설립위는 큰 문제부터 짚어 나가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는 요즘, 집유일원화를 위한 집유조합성문제는 설립위 단독으로 처리하기에 불가능하다.

아무리 형평성 있는 선정기준이 만들어 진다해도 지역간 이해관계와 조합생리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축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안과 맥락을 같이 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계약생산제는 시기상조란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낙농가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되 웬지 꺼려진다"고 말하는 진의는 무모할 정도로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속전속결'이 개별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 이리라 보아진다.

얼마전 설립위 자문위원회에서는 계약생산,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회원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낙농가가 원하는 신청량을 계약량으로 정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측은 낙농진흥회와 원유계약생산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장기적인 낙농발전을 위해서는 사소한 갈등은 견뎌야 한다는 견해다.

물론 시행과 함께 실수부분은 메꿔나가는 방안도 있어야 하겠으나 보이는 실수를 일부터 시도하겠다는 생각은 고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대로 충분한 시범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선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검사공영화방안은 목적이 농가들의 불신을 사지 않게 한다는데 있기 때문에 집유조합의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농가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설립위의 공영화방안은 실무과정에서는 일단 합적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설정된 집유노선에 따라 원유를 농가로부터 집유하고, 집유조합 자체검사원의 지도·감독 하에 검사보조원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능, 알콜, 비중, 온도, 진에 등의 검사가 실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유수요자의 유가공공장에 3인 이내의 집유관리인이 파견되는 객관성도 포함돼 있다.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기존 검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도내에서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검사업무를 각 시·도 기관에서 주관토록하고 있으나 막상을 지정받는 유업체나 관계담당자들은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를 꺼릴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검사 시설이나 관리소를 개설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활용은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

또한 검사업무에 대해 낙농가들이 건의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업무가 수반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낙농진흥회 사업은 단기일내에 시작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사업이다. 의도된대로 모두 무리없이 실시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순위일 부터 작업을 완료하고, 어려운 문제는 연구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진흥회는 한시적인 운영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 진흥회를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도 비판할 사람은 없다. 준비관계자들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진흥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틀을 짜는 작업중에 공식이나 기준은 없다. 조그맣게 시작해도 시작할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되는 일이다.

진흥회 설립과 관련,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주위 의식과 잘 못된 목표치에 두려워하면 안된다. 오직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낙농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이다. 굳이 이름 짓자면 사명감을 갖고 매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